

로그아웃 | 개인정보수정

규제정보화시스템

부처자체심사

규제심사지원

규제등록관리

규

권영한 (IP:10.104.61.46)

공지사항 | 부처발행물 등록 | 보도자료 등록 | 규제

부처자체심사

규제심사대상
현황

처리할일

심사대상여부확인

규제심사대상 목록

규제심사대상 현황

비용분석 검증

비용적정성 심의

안전관리

※ 참고

심사참고자료

입법정보/국민의견

의원발의법안

정부입법

e E보안 설정 안내

안전명



상세검색 ▲

☐ 비용관리제 검토대상 조회 ☐ 입
법예고일 변경요청 대기목록
조회

접수 번호	안전명	심사대 상여부	안전상 태	등록 일자	처리 일자	영향평가	확인 증
2019-3721	인권보호수사규칙(안)	비대상	승인	2019-10-10	2019-10-17	기술X	
2019-3675	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 정안	대상	반려	2019-10-10	2019-10-17		
-	법무부 검찰규정	-	임시저 장(실 무)	2019-10-10	2019-10-17		
2019-3574	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	비대상	승인	2019-10-02	2019-10-08	기술X	
2019-3575	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 정안	비대상	승인	2019-10-04	2019-10-08	기술X	
2019-3576	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 부개정안	비대상	승인	2019-10-04	2019-10-08	기술X	
2019-3428	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 정 개정안	비대상	승인	2019-09-25	2019-09-30	기술X	
2019-3313	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	비대상	승인	2019-09-17	2019-09-17	기술X	
2019-3263	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 안	비대상	승인	2019-09-09	2019-09-11	기술X	
-	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 안	-	임시저 장(법 무)	2019-09-09	2019-09-09		

1 2 3 4 5 6 7 8

총 73 건 (1/8)

10

※ 심사대상 현황 목록은 금일로부터 1년간의 현황이
조회됩니다. 이전 안전은 상세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규제심사대상 상세

표제부

기본정보

제 2019-3721 호

접수 번호

안건 제목

인권보호수사규칙(안)

가. 이 규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직무상의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, 검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예단이나 편견없이 중립적으로 수사 하되,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

다. 부당한 별건수사·장기간 조사를 금지하고, 심야조사·장시간 조사는 엄격히 제한함

안건 내용

라.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, 구속영장 청구, 사건종결 처분 등을 할 경우 또는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보고하도록 하고, 일정한 경우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해당 수사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

마. 압수·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며, 압수·수색 대상자, 변호인 등에게 압수·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, 압수한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면 지체없이 돌려주도록 함

바. 피의자,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, 출석 요구 시각·사유 등 관련 상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도록 함

사.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, 출석 일시 등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금지하고, 세부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훈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르도록 함

입법(행정)예고일

2019.10.15 ~ 2019.10.18

입법(행정)예고기간 변경요청 (국조준1)



입법(행정)예고안

1

91010_인권보호수사규칙(법무부령)_.hwp

수정안제출

규제영향분석서

수정안제출

부처자체 심사 초안



사전규제검토서(인권보호수사규칙).hwp

안건유형

시행규칙

규제포함 여부

규제미포함

자치법규 제개정

불필요

담당정보

담당자

권영한 (02-2110-3545)

소관부처

법무부

소관부서

형사기획과

기술규제 포함여부

기술규제 포함
여부

미포함

의견

해당없음

첨

부파일

* 검토자 :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조정과 김종윤 (043-870-5551) 검토일시 : 2019.10.16(수)10:30

23

결재정보

처리경로	처리상태	규제심사대상여부	의견
	부처담당 검토	규제심사비대상	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기존에 법무 부훈령으로 '인권보호수사준칙'이 제정 되어 시행 중이나, 최근 국민들의 수 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고양되었고, 이에 따라 수사업무 종사 자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 영하여 위 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함 으로써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
법무부 권영한 (부처실무자)	(2019-10 -15 17:22)		심야조사·장시간조사를 엄격히 제한하 고, 부당한 별건수사·수사 장기화를 금 지하며, 피해자 기타 참고인에 대한 출 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그간 수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
	부처과장 검토	규제심사비대상	규제심사비대상으로 판단 됩니다. 내부검토 요청합니다.
법무부 이근영 (법무담당자)	(2019-10 -16 06:49)		
	검토요청	규제심사비대상	검토요청합니다.
	(2019-10 -16 06:50)		

법무부

김상권

(법무승인자위임)

승인요청

(2019-10-16 14:29)

국무조정실

이재영

규제심사비대상

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공무원인 감사의 직무상 의무 등을 규정한 것. 심사 비대상입니다.

승인

(2019-10-17 17:43)

규제심사비대상

국무조정실

정일환

(부처담당과장)

문

★ 용어 설명 ★

* [내부검토요청] : 안건작성 후 부처법무팀에 검토요청